

2018년 1월 18일(목) 10:00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보도자료



- 문의 : 기재부 산업경제과 강기룡 과장(044-215-4530), 박성준 사무관(4533)
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 조재연 과장(042-481-4408), 배창우 서기관(4564)
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김정희 과장(044-201-3411), 박효철 사무관(3415)
고용부 고용정책총괄과 정경훈 과장(044-202-7210), 최승훈 서기관(7212)
금융위 중소기업과 신진창 과장(02-2100-2990), 양병권 사무관(2992)

「소상공인·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」 발표

-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'18.1.18.(木) 07:30, 당정협의를 개최하고,
「소상공인·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
대책」을 발표하였음

< 당·정 협의 개요 >

- 일시·장소 : '18.1.18.(木) 07:30~08:30, 국회 의원회관 306호 정책위의회의실
- 참석자
 - (黨) **우원식** 원내대표, **김태년** 정책위의장, **김영진** 전략기획위원장,
홍익표 수석부의장, **박홍근** 원내수석 부대표, **박광온** 제3정조위원장,
이원욱 제4정조위원장, **한정애** 제5정조위원장, **이학영** 정무위 간사 등
 - (政) **김영주** 고용노동부 장관, **홍종학** 중소벤처기업부 장관,
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, **김용범**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

- 자세한 내용은 **별첨**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별첨 : 「소상공인·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」

참 고

소상공인·영세중소기업
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

소상공인·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

2018. 1. 18.

관 계 부 처 합 동

순서

I. 그간의 추진경과	1
II. 7·16 지원대책 이행상황	2
1. 전반적 이행상황	2
2. 조치가 완료되어 시행중인 과제	3
III. 추가 보완대책	6
1. 7·16 지원대책의 보완·구체화 방안	6
2. 추가적인 부담완화 방안	14
IV. 추진계획	18

I. 그간의 추진경과

-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 해소, 내수확대,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으로, **소득주도성장 실현의 첫 걸음**
 - 「가계소득 증가→소비증가→경제성장」의 선순환을 촉진하고, 분배개선을 통한 **사회통합 강화**도 기대
- ⇒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을 통해 '18년 최저임금 7,530원(16.4% 인상) 결정
- 정부는 최저임금 발표 직후 **부담 완화** 및 **고용유지** 등을 위해 「**소상공인·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**」 발표('17.7.16일, 총 76개 과제)

※ 「7.16 소상공인·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」 주요 내용

- ① 3조원 규모의 **일자리 안정자금** 신설
- ② 카드수수료, 인건비·사회보험료, 카드수수료, 세금, 금융채무 등 각종 **경영상 비용부담 완화**
- ③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, 가맹점·대리점 보호 강화, 소상공인·중소기업 사업영역 확보, 대규모점포 입지·영업규제 강화 등 **공정거래질서 확립**
- ④ 골목상권 전용화폐 확대, 청탁금지법령 보완 등을 통한 **경영여건 개선** 및 **경쟁력 강화 지원**

-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예산안, 법률개정안 등에 적극 반영하여 **대다수 과제(68개)가 완료 또는 정상추진중**
- 정책체감도 제고 및 추가 부담완화를 위해 **보완대책** 마련
 - 기존 대책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**보완·구체화**하고, 간담회·현장방문 등을 통해 수렴한 **현장 목소리**를 새롭게 반영

⇒ 최저임금 인상이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대책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·보완하고, 핵심 입법과제의 국회통과 노력 강화

II. 7·16 지원대책 이행상황

1 전반적 이행상황

□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**매월 이행상황**(총 76개 과제)을 점검한 결과, '17년말 기준 **대다수 과제가 완료**(34개) 또는 **정상추진**(34개)중

- 34개 과제는 **법률 개정, 예산 반영** 등을 통해 **조치 완료**
 - **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**을 신설하여 근로자 **1인당 13만원**의 인건비를 지원하고, **사회보험료 부담도 1조원*** 수준 경감
 - * 두루누리사업 지원대상 확대, 건강보험 신규가입 사업주·근로자 부담 50% 감면 등
 - **세법 등 일부 법률**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'18.1월 시행

※ 입법이 완료된 과제

- ▶ 조특법·부가세법·소득세법·상속증여세법 개정안 (조세부담 완화)
- ▶ 전안법 개정안 (전기·생활용품 안전관리 개선)
- ▶ 대리점법 개정안 (대리점법 적용대상 확대)
- ▶ 가맹사업법 개정안 (가맹본부의 보복행위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)
- ▶ 하도급법 개정안 (노무비 변동시 납품단가 조정)

- 34개 과제는 **법률 개정안 제출, 사업계획 준비** 등 **정상추진중**
 - 다만, 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**핵심 입법 과제***는 **국회 통과에 다소 시일이 소요**될 것으로 전망
 - * 상가임대차법, 유통산업법,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, 가맹사업법, 대리점법, 지역상권법,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법 등
- **일부 과제**(8개)는 시행령 개정절차를 마무리하여 **'18.1분기중 완료 예정**

※ 시행령 개정이 진행중인 과제

- ▶ (국가계약법 시행령) 시중노임단가 적용, 소기업 공동사업 제품 우선구매
- ▶ (상가임대차법 시행령) 환산보증금 상향, 보증금·임대료 인상을 상한 인화
- ▶ (유통산업법 시행령) 상점가 기준 완화
- ▶ (가맹사업법 시행령) 필수물품 정보공개 확대, 영업시간 단축요건 완화

2 조치가 완료되어 시행중인 과제

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

- (지원대상) **30인 미만 고용 사업주**를 원칙으로 하되, 고용위축 가능성이 높은 **공동주택 경비·청소원** 고용 사업주는 **예외 인정**
- (지원요건) 월보수액 **190만원** 미만 노동자 **1개월 이상** 고용
 - **최저임금**을 준수하고, **고용보험**에 가입한 경우에만 지원하되, **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***에는 미가입자도 지원
 - * 합법취업 외국인, 5인 미만 농림·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·어가의 노동자, 초단시간(주 15시간 미만) 노동자, 신규취업한 만 65세 이상자 등
- (지원금액) 과거 추세를 상회하는 인건비 추가부담 **12만원**과 노무비용 등 **추가 부담분 1만원**을 합산한 금액

② 4대 보험 : 두루누리 지원 확대 및 안전망 확충

-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두루누리 지원대상 월 보수기준 **상향***
 - * 월보수기준(예산액) : ('17) 140만원 미만(5,202억원) → ('18) 190만원 미만(8,932억원)
- **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***(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, '18.1.1일 시행)
 - * (기존) 창업 후 1년 이내 → (개선) 창업 후 5년 이내
- **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업종에 제조업 8개 분야*** 추가 (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, '18.1.1일 시행)
 - * 1차금속, 금속 가공제품, 전자부품·컴퓨터·영상·음향 및 통신장비, 의료·정밀·광학기기 및 시계, 전기장비, 기타 기계 및 장비, 귀금속 및 장신용품, 자동차 정비업

③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

- 영세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**우대 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**(여전법 시행령 개정, '17.7.31일 시행)

* 영세가맹점(0.8% 수수료율 적용) : 연매출액 2억원 이하 → 3억원 이하
중소가맹점(1.3% 수수료율 적용) : 연매출액 3억원 이하 → 5억원 이하

④ 부가가치세 등 조세부담 완화

- 근로소득중대세제*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중·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증가를 유도하도록 개선(일몰기한 '17년→'20년, 3년 연장)
 -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10% → 20%로 상향 조정
 - 적용대상 근로자 범위를 중·저소득 근로자로 조정(총급여 1.2억원 미만 → 7천만원 미만)
-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(8/108→9/109, 2년 한시)
- 의료비·교육비 등 세액공제 대상 성실사업자 요건 완화*

* 장부기장 의무(복식부기→간편장부), 수입금액 요건(3년 평균액의 90% 초과→50% 초과) 등

⑤ 금융채무 부담 완화 및 재창업 지원

- 영세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(1.0~1.3%p 인하)·보증료를 적용하는 **상생대출 프로그램**(1.2조원 규모) 출시('17.12.29일, 기은)
- 성실실패자의 재창업 지원을 위해 **채무감면율**(최대 75%) 및 **보증비율**(50%→80%) 확대('17.9월)

⑥ 기타 부담 완화 및 경영상 애로 해소

【 고용연장지원금 지원 확대 】

- 아파트경비 등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자에 대한 **고용연장지원금 지원 확대**('17년 63억원→'18년 173억원)
 - * (지원금액 상향) 분기당 18만원→24만원, (일몰기한 연장) '17년→'20년

【 가맹점·대리점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】

- 대리점법 시행('16.12.23일)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도 대리점법이 적용되도록 **적용대상 확대**(대리점법 개정, '17.10.31일 시행)
- 가맹본부의 **보복행위 금지규정**을 신설하고, 보복행위에 대한 **징벌적 손해배상** 도입(가맹사업법 개정, '17.12.29일 국회 통과)
- 가맹본부의 허위·과장정보 제공 방지를 위해 「**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제공 가이드라인**」 마련('17.12.27일)

【 최저임금 인상시 가맹금·하도급대금 조정 】

- **최저임금 인상시** 로열티·필수물품 공급가격 등 **가맹금을 조정**하도록 **표준가맹계약서 개정**('17.12.29일)
- **최저임금 인상** 등으로 노무비 변동시 **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·협의 신청권** 신설(하도급법 개정, '17.12.29일 국회 통과)

【 소상공인의 재창업 및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 확대 】

- 과밀업종에서 **비과밀업종으로 재창업**하고자 하는 소상공인, **임금근로자로 전환**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
 - * 재창업패키지(재창업 지원) : '17년 당초 25억원 → 추경 50억원
 - 희망리턴패키지(임금근로자 전환) : '17년 당초 75억원 → 추경 85억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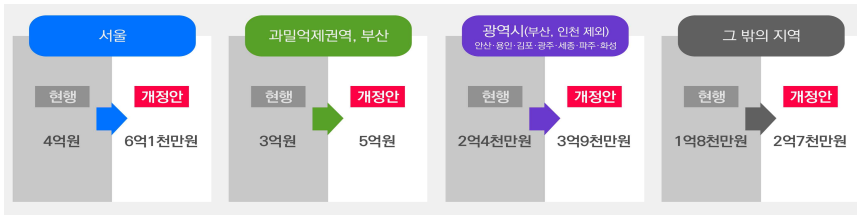
Ⅲ. 추가 보완대책

1 7·16 지원대책의 보완·구체화 방안

① 상가임대료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임차환경 조성

【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 】

- 임차권 보호의 사각지대 축소 및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**상가임대차법 시행령**을 1월중 개정하고, 즉시 **공포·시행**(’18.1.26일)
 -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**환산보증금***을 지역별로 **50% 이상 인상**(전체 임차인의 약 95% 보호)
 - * 환산보증금 = 보증금 + (차임 × 100)
 - 보증금·임대료 인상을 대폭 **인하**(9%→5%)하고, 임대료 급등 방지를 위해 기존 상가임대차 계약에도 적용



【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위한 대안 마련 】

-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**대안 마련** 및 **사회적 공감대** 형성 병행
 - 관계부처,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「**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TF**」를 구성(’18.1월)하고, TF 논의를 거쳐 **대안 마련**(’18.9월)
 - **공청회**, **시민단체 간담회** 등을 통해 **사회적 공감대** 형성

※ 주요 논의과제(안)

- ①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 포함
 - ②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(現 5년),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
 - ③ 건물주가 재건축·철거 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 연장 거절시 임차인 보호방법(퇴거보상제 및 우선임차권 도입 등) 및 범위
- *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의 사회·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연구용역 등 추진

【 상가임대차 분쟁의 신속한 조정 】

-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여 **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** 설치·운영(상가임대차법 개정, ’18.9월~)
 -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**인력·조직 등 개편** 추진(’19년~)
 - 지리적 접근성이 낮은 **소외지역** 소상공인을 위해 ‘**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**’ 운영(’19년~, 법률구조공단)
-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**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**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도록 **법적 근거 마련**(상가임대차법 개정, ’18.9월~)

②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·등록·영업규제 강화

※ 현재 유통산업법 개정안(’17.9.29일)이 국회 계류중이며, 중소기업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유통산업법 개정안 수정 발의 예정(’18.1월)

- (**입지규제**) 현행 2단계 입지규제(전통상업보존구역·일반구역)를 **3단계**(상업보호구역·일반구역·상업진흥구역)로 개편
 -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입지규제 강화를 위해 기존 **전통상업보존구역**을 확대한 **상업보호구역*** 신설

* 상업보호구역 : 기존 전통상업보존구역(전통시장·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1km 이내)
+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구역(상점가 등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)

<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: 입지규제 >

현 행 (2단계)			개정안 (3단계)	
전통상업보존구역	등록제한 가능	⇒	상업보호구역	입지제한 강화
일반구역	등록제도	⇒	일반구역	등록제도 유지
		⇒	상업진흥구역	등록요건 완화

- (등록규제) 상권영향평가서·지역협력계획서 등 現 등록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
 - 상권영향평가 대상을 확대*하고, 제3의 기관**에서 작성 대행
 - * (기존) 소매점 → (추가) 해당 대규모점포에 입점이 계획된 업종
 - **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상권영향평가기관(대학·연구소 등) 지정
 - 지역협력계획서 대상범위에 인접지자체를 포함하고, 대규모 점포가 지역협력계획서 미이행시 미이행사실 공표
- (영업규제) 복합쇼핑몰을 영업규제(영업시간 제한, 의무휴업일 월 2회 지정) 대상에 포함하고, 일부 점포*들은 대상에서 제외
 - * (예) 복합쇼핑몰내 영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

③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

-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 생업 보전 및 소득 증대 등을 위해 「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」(국회 계류중) 제정

※ 법안 주요내용

- ① (지정절차) 민간 합의기구인 동반성장위가 업종 추천 → 심의위원회 심의·의결 → 해당 업종을 지정·보호
- ② (지정기간)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속적·안정적 보호를 위해 5년마다 재심의·지정
- ③ (이행력 확보) “시정명령 → 위반사실 공표 → 이행강제금 부과” 등을 통해 대기업의 법 위반사항 제재

- 신청 업종의 소득규모·영세성 등을 감안하여 정부가 직접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
-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·확장 등을 제한하고, 법 위반시 이행강제금 등 행정벌 부과
- 적합업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업종 특성, 시장여건 등을 감안한 「적합업종 경쟁력 강화방안」 마련('18.6월)
 - 업종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공동·협동화 사업, 업종 공통 R&D·사업화, 新시장 개척, 대·중소 상생협력 등 지원

④ 분야별 각종 경영애로 해소

【 청탁금지법령 개정 】

- 농축수산물 생산·유통, 화훼업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청탁 금지법 시행령 개정*을 완료·시행('18.1.17일)
 - * 농축수산물(화훼 포함) 및 농축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선물가액 상한 상향(5→10만원), 경조사비를 하향조정(10→5만원)하되, 화환·조화의 경우 10만원까지 허용

【 전기·생활용품 안전관리법(“전안법”) 개정 】

- 소상공인 규제 불확실성 및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·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을 '18.6월까지 완료
 - 위해도가 낮은 일부 생활용품을 인증부담을 완화한 안전관리 체계(안전기준준수 단계)*로 신설
 - * 기존 3단계 안전관리체계를 4단계로 개편(안전기준준수 단계 신설)하고, 신설된 안전기준준수 단계에 대해서는 KC마크 표시, 시험성적서 보관 의무 면제('17.12.30, 법개정)

- 의류업종 종사 **소상공인**의 부담을 **최소화**하는 방향으로 **안전 기준준수 대상품목***을 조속히 **선정**(전안법 시행규칙 개정, '18.6월)

* (예) 섬유, 장신구, 가죽제품 등

- 의류·장신구 등 생활용품 분야 **소상공인 밀집지역**에 **시험 점사**를 위한 **공동 시험장비 구축**('18.10월, 17.4억원 투입)

【 예약부도 피해 축소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】

- 연회시설 운영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**예약부도 위약금**을 **모든 외식업**으로 확대(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, '18.2월)

< 연회시설 운영업 이외의 외식업 관련 위약금 기준 >

취소 시기	위약금
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 前 이전에 취소	없음(예약보증금 환급)
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 前 이후에 취소	예약보증금

* 다만, 예약시 예약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

【 산재보험 가입대상 확대 】

- **1인 자영업자**에 대한 **산재보험 적용업종**에 8개 제조업종에 이어 **자영업자 종사비율이 높은 서비스업*** **추가**(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, '18.12월)

* (예) 음식점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화상·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한 재해보상

- 근로자 50명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의 **무급가족종사자**도 산재 보험에 **가입**할 수 있도록 **허용**(산재보험법 개정, '18.12월)

【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】

- **대리점거래 실태조사**('17.8~12월) 결과를 바탕으로 본사의 **공정 거래질서 확립**을 위한 **종합대책*** 마련·발표('18.5월)

* 대리점법 개정사항, 본사-대리점간 자율협력 확대,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

- 본사의 **불공정거래*** 여부를 상시 감시하고, 법 위반혐의 적발시 **엄정하게 조사·제재**

* (예) 대리점에 판매목표 강제, 합리적인 이유없이 대리점 계약 중도해지 등

5 골목상권 전용화폐 활성화

【 골목상권 전용화폐 지급 확대 】

-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중 **온누리상품권·고향사랑상품권** 등 **골목상권 전용화폐 지급비율 상향**(10%→30%)

*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 개정('17.12.28)

※ 공무원 온누리상품권 지급액 : ('17년) 843억원 → ('18년) 2,529억원

- 지자체 자율로 **아동수당**을 **골목상권 전용화폐**로 지급할 수 있도록 **법적 근거**(아동수당법)을 마련하고, **9월부터 지급** 추진

【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및 사용편의 증진 】

- 사용 편의 제고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**상점가 기준**을 **완화***하여 사용처 확대(유통사업법 시행령 개정, '18.1월)

* 상점가 기준 : (기존) 2,000m²에 50개 이상 → (변경) 30개 이상

※ 상점가 기준 완화시 상점가가 6,573개 증가(現 220개)할 것으로 추정(소진공)

- 전통시장 판매 촉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**할인율**(5%→10%) **상향**('18.2.1~14일)

- 전통시장 전용 **모바일 결제시스템***을 시범 도입하여 온누리 상품권의 **활용 편의 제고**

*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, 전용 입출금 계좌 및 체크카드 연동 시스템 구축

【 소상공인 전용 고향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반 마련 】

- 지역상권 매출 증대를 위해 특정지역내 **소상공인** 업체에서만 사용가능한 **고향사랑상품권**의 **법·제도적 기반** 마련

- 고향사랑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「**고향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**」 제정('18.9월~)

- 전국단위 거래가 가능하도록 **모바일상품권 공동 플랫폼** 구축 추진(행안부-조폐공사 MOU, '18.6월)

⑥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지원

【과당경쟁 완화 :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과밀업종 지정】

- 지역별 상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전 예측정보까지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맞춤형 컨설팅 제공('18.12월~)
- 영업이익, 소상공인 수, 폐업률 등을 고려하여 과밀업종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, 과밀업종 시범지역 지정('18.12월)
- 과밀업종 사업자 또는 예비창업자가 유망·특화 업종으로 전환·진입할 수 있도록 교육·정책자금 등 지원사업 우대

【혁신형 소상공인 및 숙련기술 기반 소공인 육성】

- 이미 높은 수준의 혁신성을 보유하고 있거나 성장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“혁신형 소상공인”으로 선정('22년까지 1.5만명)
- 소공인 판로지원 사업*을 수요자가 원하는 지원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 방식으로 개편(300개社, 3천만원 한도, 85억원)
- * (예) 온라인몰 입점, 홍보동영상 제작, 국내외 전시회 참가, 디자인 개발 등
- 소상공인들이 시제품 제작, 비즈니스 모델 실증 등을 할 수 있도록 「소상공인 R&D 센터」 설립 지원

【소상공인 협업화 촉진】

- 규모·업종·역량 등을 고려하여 협동조합 유형을 구분하고, 유형별 차등지원*을 통해 선도형·체인형 협동조합 육성
- * 협동조합 유형(①일반형, ②선도형, ③체인형)에 따라 2~5억원 차등 지원
- 소상공인의 협업화 역량 강화를 위해 협업인큐베이팅*, 협동조합 아카데미** 등 지원인프라 확충

* 조합원 신뢰 구축, 협동조합 특화교육, 비즈니스 모델 설계 등 지원

** 소상공인 협동조합 전용 교재·교육과정 개발, 기본·전문 교육과정 운영 등

⑦ 「소상공인 활성화 법안」 국회통과 노력 강화

- 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한 활성화 법안을 선정하고,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입법전략 마련('18.2월)
- '18.2월 임시국회에 대비, 관계부처 합동 「(가칭)소상공인 활성화 법안 TF」를 구성하여 대국회 입법지원 활동 강화
- 소상공인 활성화 법안의 입법상황 밀착 관리 및 지속 추가

< 소상공인 활성화 법안 >

법 률	관 련 과 제	부 처	추 진 상 황
유통산업법	- 대규모점포 입지규제 세분화·강화 - 대규모점포 등록규제 실효성 제고 - 대규모점포 영입규제 대상에 복합쇼핑몰 포함	산업부	개정안 계류 (산중위)
대리점법	-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 명문화 - 대리점 본사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 도입	공정위	개정안 계류 (정무위)
가맹사업법	-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- 가맹본부 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화	공정위	개정안 계류 (정무위)
하도급법	- 건설분야 공사 연장시 계약금액 조정	공정위	개정안 마련 (정무위)
중소기업협동조합법	- 노란우산공제 수급계좌 압류금지	중기부	법사위 회부 (9.27일)
중소기업창업지원법	- 부담금 면제 확대	중기부	개정안 계류 (산중위)
상가임대차법	-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-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 - 재건축·철거시 임차인 보호 -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검토	법무부	개정안 계류 (법사위)
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(제정)	-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정부지정 전환	중기부	개정안 계류 (산중위)
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법 (제정)	- 낙후상권 활성화 및 상권내몰림 방지	중기부	개정안 계류 (산중위)
공정거래법	-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범위 확대 - 중기협동조합 공동사업에 대한 담합금지 적용배제	공정위	개정안 계류 (정무위)

2 추가적인 부담완화 방안

① 소액결제 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

- 소액결제 업종(편의점·슈퍼마켓·제과점 등)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**밴(Van)수수료 부과방식 개선**(‘18.7월 시행)
 - 밴수수료 부과방식을 결제건별로 동일금액을 부과하는 방식(정액제)에서 **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**를 부과하는 방식(정률제)로 개선
- 빈번한 소액결제로 **수수료율이 높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큰 소액결제업종에 부담 경감 효과***
- * 제도개선으로 혜택을 받는 가맹점은 약 10만개, 가맹점당 평균 0.3%p(연간 270만원)의 카드수수료를 인하 효과 기대

② 상가임대료 부담 완화

※ 관계부처 합동 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TF」를 통해 입법방안 마련(‘18.9월)

【 임대료 동향조사 강화 및 상생협약 유도 】

- 상가임대료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**종합계획***(5개년) 및 연도별 **실행계획** 수립 제도화(통합 입법안 마련, ~‘18.9월)
 - * 지역별 상가임대료 현황 및 전망을 바탕으로, 임대료 안정화를 위한 개선책 마련(국토부 종합계획↔시도별 계획 연계)
- 임대료 변동 동향, 상권내몰림 징후 등의 **사전 모니터링**이 가능하도록 **임대동향조사 체계 개선 및 조사 확대**
 - 임대료·공실률 등 기존 지표에 더하여 실거래 가격 등 **가격 지표, 지역변화 동향 등 다양한 조사지표 발굴**(‘18.4월)

- **임대동향조사**(분기별) **대상을 대폭 확대***하고, 협력 공인중개사를 활용한 **월별 동향조사**도 추진

* (기존) 핵심상권(232개) → (추가) 도시재생지역, 젠트리피케이션 예상지역 등
→ 임대동향조사 결과에 따라 **관심·경계·심각지역**으로 구분

- 임대동향조사 내실화를 위해 **조사표본 수**를 ‘22년까지 단계적으로 **대폭 확대**(‘17년 4,831개 → ‘22년 11,287개)

- 임대료가 급등(예상)하는 **경계·심각지역***내 **상생협약**에 대한 **인센티브*** 제공(상가임대차법 개정 및 지역상권법 제정, ~‘18.9월)

* (예) 상가임대료 안정화 구역,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, 지역상생구역 등
** (예) 리모델링시 용차, 지방세·부담금 등 감면, 용적률 상향, 주차장 규제 완화 등

- 임대료 상승이 예상되는 **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**(‘17년 68개, ‘18년 100개 내외)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**상생협약 조례** 제정 유도(‘18.12월)

- 특별시·광역시, 일정인구 이상 대도시 등의 상가임대차 계약시 **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**(국토부) 활용 촉진(‘18.1월~)

【 공공상생상가·착한상가 운영 】

-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내 **임차상인보호**를 위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해 주는 “(가칭)공공상생상가” 공급
 - 주택도시기금 등 다양한 재원 및 운영주체를 활용한 「**공공상생상가 설치방안**」 마련(‘18.8월)
 - ‘17년 선정된 **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**을 대상으로 공공상생상가 **시범사업** 착수(‘18.9월~)
- 신규 장기 **공공임대주택** 단지내 상가 일부(40%)를 **소상공인** 등에게 저가(주변시세의 80%)로 제공하는 ‘(가칭)**착한상가***’ 운영(‘18.6월, LH)
 - 「**착한상가 공급계획**」을 수립(‘18.4월)하고, ‘18년말까지 **소상공인** 등에게 **시범공급**하고, ‘19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 확대

③ 자금부담 완화 : 2.4조원 규모의 융자·보증 공급

【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신설 】

- 소상공인·중소기업 등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시중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 프로그램(1조원) 제공('18.2.1일 출시, 기은)

※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개요

- ① (대상) 소상공인 및 창업·중소기업(업력 7년 이내)
- ② (금리)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대출시점의 은행간 단기 기준금리(1.15% 기준, 1.95%) 적용
 - 최초 1년간 대출 실행시점의 기준금리를 적용하고, 1년 이후 고용유지 여부에 따라 대출금리 조정
 - * (고용 유지시) 기간연장 시점의 기준금리 지속 적용 (고용 감소시) 기간연장 시점의 정상금리로 환원
- ③ (한도) 소상공인인 경우 5,000만원, 창업·중소기업인 경우 2억원

【 소상공인·중소기업 정책자금 확대 】

-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신설('18.2월)

* 보증료를 인하(1.0→0.8%), 보증한도 7천만원, 100% 전액보증

-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을 긴급융자자금으로 운용(2,000억원) 하고, 낮은 금리 적용(일반 2.94%→긴급 2.5%)
- 중소기업 긴급융자자금(500억원)에 적용되는 금리 인하(3.35%→3.0%)
- 청년근로자 신규채용 등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는 소상공인 대상 「청년고용 특별자금」 대폭 확대 및 한도·금리 우대('18.1월)

* ('17) 500억원 → ('18) 2,000억원, 금리 2.74%(1/4분기), 한도 1억원

- 매출·신용이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에 따라 상환액을 탄력 조정하는 대출프로그램(200억원) 신설('18.2월)

※ 매출연계 대출 프로그램 개요

- ① (지원범위) 신용 4~7등급 또는 간이과세(연 매출 4,800만원 이하) 소상공인의 年 카드매출 200% 범위내에서 지원
- ② (상환방식) 월 상환액은 자금 융자지원시 월 카드매출액의 10~20% 범위에서 자동으로 상환

- 정책자금 조기상환시 부과되는 추후 대출제한 등 패널티 폐지

【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】

-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은 월 배정 한도(평균 1,300억원), 접수 시기(매월 1~2주)와 관계없이 융자자금 상시 접수·지원('18.1월)
-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10인 미만 영세 소기업에게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한시 제공('18년 한시)('18.2월)
- 정부의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 선정시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게 추가 가점 부여(5점, '18.1월)

IV. 추진계획

번호	정책과제	일정	부처
① 7·16 지원대책 보완·구체화 방안			
1	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	‘18.1월	법무부
2	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TF 구성 및 대안 마련	‘18.9월	법무부
3	대규모점포 규제 합리화 (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)	‘18.1월~	산업부
4	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(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)	‘18.6월	중기부
5	청탁금지법령 개정	‘18.1월	권익위
6	섬유·의류 관련 소상공인 안전관리 부담 완화 (전기·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)	‘18.6월	국표원
7	예약부도 피해 축소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	‘18.2월	공정위
8	산재보험 가입대상 확대	‘18.12월	고용부
9	대리점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	‘18.5월	공정위
10	골목상권 전용화폐 활성화	‘18.1월~	행안부 인사처 복지부 중기부
11	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지원	‘18.1월~	중기부
12	「소상공인 활성화 법안」 국회통과 노력 강화	‘18.2월~	관계부처
② 추가적인 부담완화 방안			
1	소액·다결제 업종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방안 마련	‘18.7월	금융위
2	임대료 동향조사 강화	‘18.4월~	국토부 법무부 중기부
3	경계·심각지역내 상생협약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	‘18.9월~	
4	공공상생상가·착한상가 운영방안 마련	‘18.4월~	
5	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마련	‘18.2월	금융위
6	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	‘18.1월~	중기부
7	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	‘18.1월~	중기부

별첨

7·16 지원대책 세부 이행상황

번호	과제명	시행시기	부처
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및 비용부담 완화 (20개 과제)			
1-1	일자리 안정자금 : 30인 미만 고용사업체 대상,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	‘18.1월	고용부
1-2	고용연장지원금 : 아파트경비 등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유지 사업주 대상, 분기에 1인당 24만원(기존 18만원)	‘18.1월	고용부
1-3	두루누리 사업 : 지원대상 월 보수기준 상향 (140만원 미만→190만원 미만)	‘18.1월	고용부
1-4	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: (영세가맹점 ; 0.8%) 2억원~3억원 이하, (중소가맹점 ; 1.3%) 3억원~5억원 이하	‘17.7월	금융위
1-5	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 마련	‘18.11월 (‘19.1월 시행)	금융위
1-6	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상향(8/108→9/109) : 연매출 4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음식점 대상	‘18.1월	기재부
1-7	의료비·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 성실사업자 요건 완화	‘18.1월	기재부
1-8	영세자영업자 폐업후 재창업·취업시 체납세금 면제 (1인당 3천만원 한도, ‘18년 한시 적용)	‘18.1월	기재부
1-9	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규모 확대 : ‘18년 2조 2,760억원(‘17년 대비 267억원 증액)	~‘22년	중기부
1-10	지역신보 보증공급 확대 : (‘17) 18조원 → (‘18) 18.5조원 (‘22년까지 23조원 규모까지 확대)	~‘22년	중기부
1-11	소상공인 상생대출 프로그램(기업은행) : 1.2조원 규모, 대출금리 1.0~1.3%p 인하, 보증료 일부 감면	‘17.12월	금융위
1-12	성실실패 자영업자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: 연체채무 최대 75% 감면, 보증비용 확대(50%→80%)	‘17.9월	금융위
1-13	노란우산공제 가입창구 확대 : 59개 소상공인지역센터 가입·홍보 활용 (現 113만명, ‘22년까지 160만명 가입목표)	‘17.7월	중기부
1-14	노란우산공제 임의해지시 부과세율 인하(20%→15%)	‘18.1월	기재부
1-15	노란우산공제 수급제좌 압류 금지조항 마련 (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)	국회계류	중기부
1-16	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: (기존) 창업 후 1년 이내 → (개선) 창업 후 5년 이내	‘18.1월	고용부
1-17	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허용업종 확대 : (기존) 운송·택배·대리운전업 등 → (추가) 8개 제조업종	‘18.1월	고용부
1-18	전기·생활용품 안전관리 부담 완화 : KC마크 표시, 서류 보관 등 의무 면제(전안법 개정, ‘17.12월) → 보완대책에 반영	‘18.1월	산업부 (국표원)
1-19	소상공인 밀집지역 등에 전기·생활용품 공동시험장비 구축(‘18년 17.4억원 반영)	‘18.10월	산업부 (국표원)
1-20	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대상범위 확대 (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,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상정)	국회계류	중기부

번호	과제명	시행시기	부처
②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(37개 과제)			
2-1	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을 정하는 환산보증금 상향(역원) : (서울) 4.0→6.1, (부산 등) 3→5, (광역시) 2.4→3.9, (기타) 1.8→2.7	‘18.1.26일	법무부
2-2	권리금 보호대상 에 전동시장 포함(상가임대차법 개정)	국회계류	법무부
2-3	보증금 ·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(9%→5%)	‘18.1.26일	법무부
2-4	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(現 5년) 연장 (상가임대차법 개정)	국회계류	법무부
2-5	재건축 · 철거시 임차인 보호방안 (퇴거보상제 · 우선임차권 등) 마련	국회계류	법무부
2-6	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(상가임대차법 개정)	국회계류	법무부
2-7	대형상가 부당 관리비 징수행위 방지 (유통산업법 개정 완료)	‘18.5월	산업부
2-8	상권주체간 상생협약 체결시 상권환경개선 지원 (‘18년 예산안 60억원 반영, ‘18.6월 상권 선정)	‘18.6월	중기부
2-9	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내 상생협약 체결시 인센티브 부여(도시재생 특별법 개정, ‘17.12월)	‘18.1월~	국토부
2-10	「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법」 제정(통합 입법안 마련)	국회계류	중기부
2-11	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(가맹사업법 개정)	국회계류	공정위
2-12	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 명문화 (대리점법 개정)	국회계류	공정위
2-13	가맹본부의 판촉행사 에 대한 가맹점주의 사전동의 (가맹사업법 개정)	국회계류	공정위
2-14	가맹사업 필수물품 관련 정보공개 확대 (집중점검 실시,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)	‘18.3월	공정위
2-15	가맹사업 정보공개 허위기재 실태조사 (‘17.12.12일 결과 발표)	‘17.12월	공정위
2-16	대리점법 을 대리점법 시행(‘16.12.23일)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도 확대 적용 (대리점법 개정)	‘17.10월	공정위
2-17	편의점 등 가맹점 심야 영업시간 단축요건 완화	‘18.3월	공정위
2-18	가맹본부의 보복행위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(가맹사업법 개정, ‘17.12월 국회통과)	‘18.7월	공정위
2-19	대리점본사의 보복행위 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(대리점법 개정안 제출)	국회계류	공정위
2-20	가맹본부의 허위 · 과장정보 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	‘17.12월	공정위
2-21	최저임금 인상시 가맹금 을 조정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 개정	‘17.12월	공정위
2-22	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신설	‘17.7월	중기부
2-23	「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」 제정	국회계류	중기부

번호	과제명	시행시기	부처
②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(37개 과제)			
2-24	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경쟁력 강화 :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, 선도형 · 체인형 협동조합 육성 등	‘17.8월	중기부
2-25	중소기업 적합업종 사업조정 권고기간 연장 (3년→5년)	국회계류 (상생협력법 개정)	중기부
2-26	중소기업 적합업종 자료제출 · 출석요구권 신설	‘18.6월	중기부
2-27	중소기업 적합업종 유형에 따라 사업화 지원 (적합업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)		중기부
2-28	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총수일자 지분을 기준 강화 (기존) 상장 30%, 비상장 20% → (개선) 상장 · 비상장 20%	국회계류	공정위
2-29	일감몰아주기 예외사유 엄격 적용 및 직권 조사	‘17.7월	공정위
2-30	일감몰아주기 중여의제이익 에 대한 과세 강화	‘18.1월	기재부
2-31	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 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· 협의 신청권 신설(하도급법 개정, ‘17.12월)	‘18.7월	공정위
2-32	공공부문 노무비 산정시 시중노임단가 적용 및 계약금액에 시중노임단가 연동 (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)	‘18.1월	기재부
2-33	건설공사 기간연장시 계약금액 조정 의무화 (하도급법 개정)	국회계류	공정위
2-34	대규모점포 에 대한 입지규제 가 강화된 상권보호구역 신설	국회계류 (유통산업법 개정)	산업부
2-35	대규모점포 신규출점 등록시, 상권영향분석 대상 확대 및 제3기관 작성		
2-36	대규모점포 영업규제 대상에 복합쇼핑몰 포함		
2-37	소재지 외 할인판매 등 대규모점포의 편법행위 금지		
③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지원 (19개 과제)			
3-1	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중 30%를 골목상권 전용화폐 로 지급	‘18.1월	인사처 행안부
3-2	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	‘17.12월~	복지부 행자부
3-3	청탁금지법령 보완 :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선물가액 상한 상향(5→10만원), 조화 · 화환의 경우 경조사비 예외	‘18.1월	권익위
3-4	예약부도 방지를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	‘18.2월	중기부 공정위
3-5	상권정보시스템 기능 고도화	‘18.1월	중기부
3-6	소상공인 창업과밀지수 대상업종 확대 (30개→45개)	‘17.12월	중기부

번호	과제명	시행시기	부처
----	-----	------	----

③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지원 (19개 과제)

3-7	위험요인을 사전예보하는 창업기상도 구축	’18.11월	중기부
3-8	소상공인 과밀지역 지정 및 창업지원 차별화	’18.7월	중기부 지자체
3-9	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지원사업 확대 (’17년 25억원 → 50억원, 추경)	’17.6월	중기부
3-10	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(임금근로자 전환) 지원사업 확대(’17년 75억원 → 85억원, 추경)	’17.6월	중기부
3-11	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 (’17년 753억원 → ’18년 788억원)	’18.1월	중기부
3-12	청년상인 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청년상인 스타트업 지원단 신설(’17.10월)	’17.10월	중기부
3-13	혁신형 소상공인 양성 기본계획 수립 (’22년까지 1.5만명 육성)	’18.3월	중기부
3-14	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확대(’18년말까지 15개)	’17.9월	중기부
3-15	단계별 소상공인 협동조합 육성체계 구축	’17.12월	중기부
3-16	중소슈퍼마켓 협업화 모델 확산 (중소슈퍼 체인화 지원사업, ’18.1월 시행)	’18.1월	중기부
3-17	유통산업법상 상점가 기준 완화 (유통산업법 시행령 개정)	’18.1월	산업부
3-18	중소기업 공동사업에 대한 담합금지규정 적용 배제 (공정거래법 개정사항, 관련 고시 개정)	’17.9월~	공정위
3-19	소기업 공동사업 생산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(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)	’18.1월	기재부